

에너지 가격·세제 정책의 국내외 동향

정 연 제
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
2019. 1. 10



제2차 에기본의 주요 정책과제

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에너지원 간 소비왜곡 개선

- 세율조정: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, LNG 과세 완화
- 요금조정: 원전관련 비용, 송전 비용, 청정연료 전환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하여 전기요금에 반영
- 취약계층 보완대책: 에너지바우처,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확대 등

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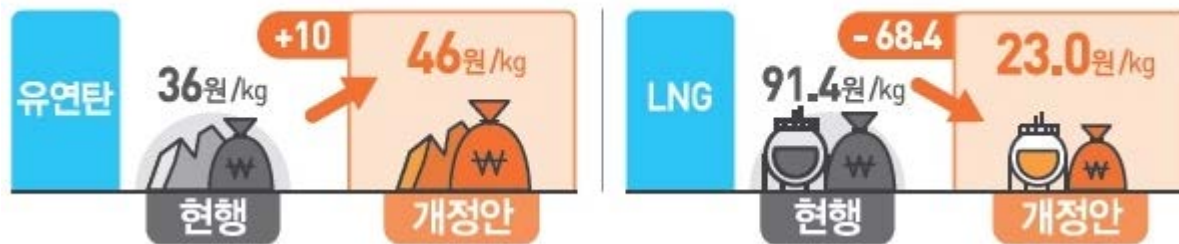
- 전기요금 수준 정상화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
- 주택용 누진제 개선
- 수요관리형/선택형 요금제 확대
-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

제2차 에기본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경과(1)

에너지원 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

- '14.7 세법개정을 통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최초 부과
- '19.上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

발전용 유연탄·LNG 제세부담금 조정



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선

- 전기요금 수준 정상화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
- 주택용 누진제 개선
- 수요관리형/선택형 요금제 확대
-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



제2차 에기본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경과(2)

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시행

- TOU 및 CPP 등의 수요관리형 요금제 대폭 강화할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, 실제 성과는 미진

주택용 누진제 개선

- '16.12 주택용 누진제 완화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일부 개편
- '18.하반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위한 민관 TF 구성

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

-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체계 개편 추진(국정과제)

용도별 요금체계 개선 및 도/소매 가격 연계

- 전압별 요금체계 및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많으나 실제 성과 미진



에너지 저효율 소비구조 지속

연평균 2% 이상의 총 에너지 소비 증가

-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소비 감소세

<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 (% , 연평균) >

구 분	'80 ~ '00	'00 ~ '16
한국	7.88	2.61
일본	2.06	△1.25
OECD	1.33	△0.05

에너지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

-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선진국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 사용
- 한국 0.159, 미국 0.123, 일본 0.089, OECD 0.105

전력으로의 에너지소비 대체

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한 전력화 현상 심화

<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변화율('00~'17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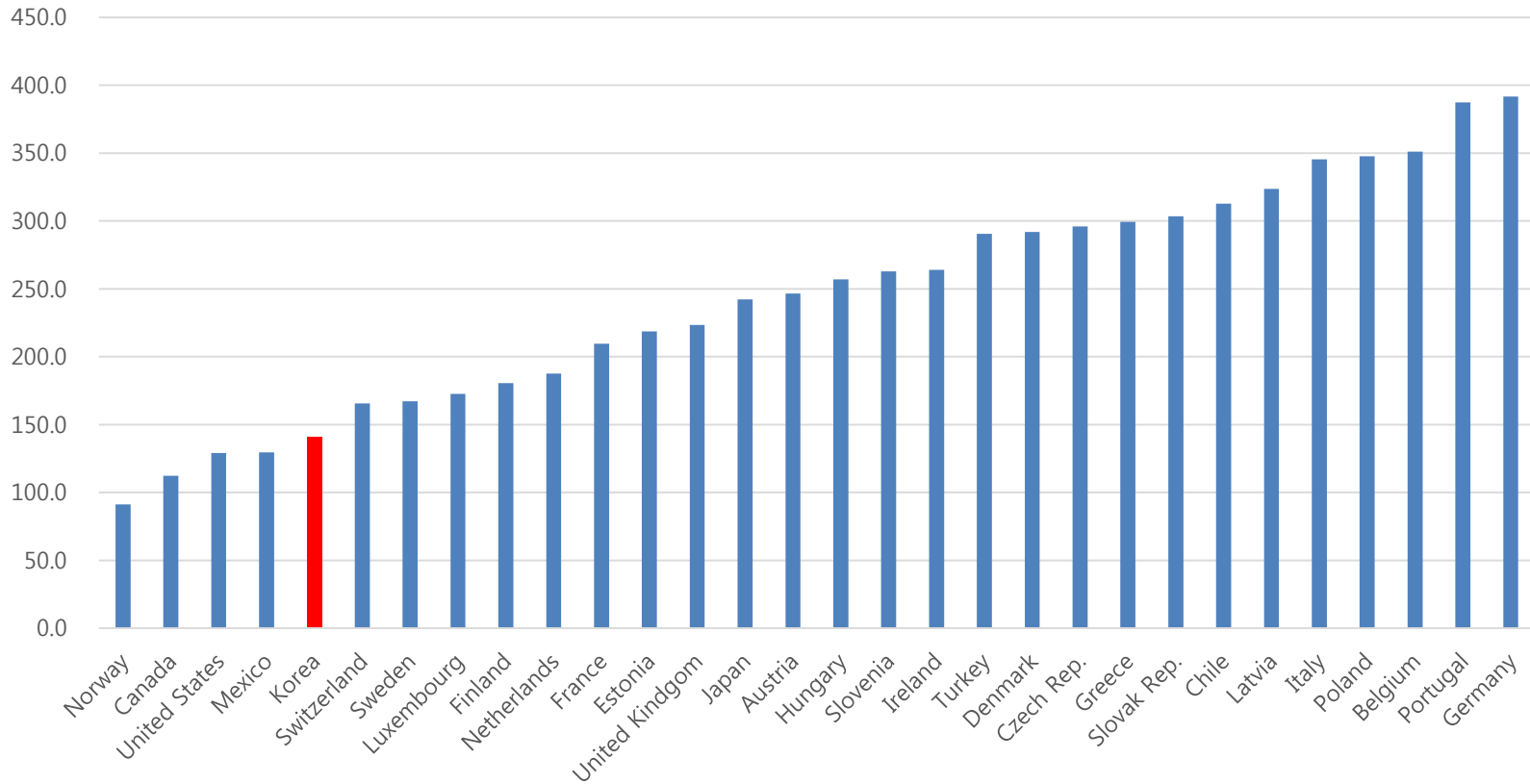
구분	에너지원별 가격 변화율			에너지원별 소비 변화율		
	석유*	전력	도시가스	석유*	전력	도시가스
가정부문	52.5%	14.5%	47.6%	△62.1%	79.3%	42.0%
상업부문	52.5%	23.0%	68.6%	△41.9%	138.6%	124.3%
산업부문	104.7%	84.2%	96.6%	56.6%	109.2%	146.9%

* 가정·상업부문(등유), 산업부문(경유)

전기요금 국가별 비교(주택용, 2017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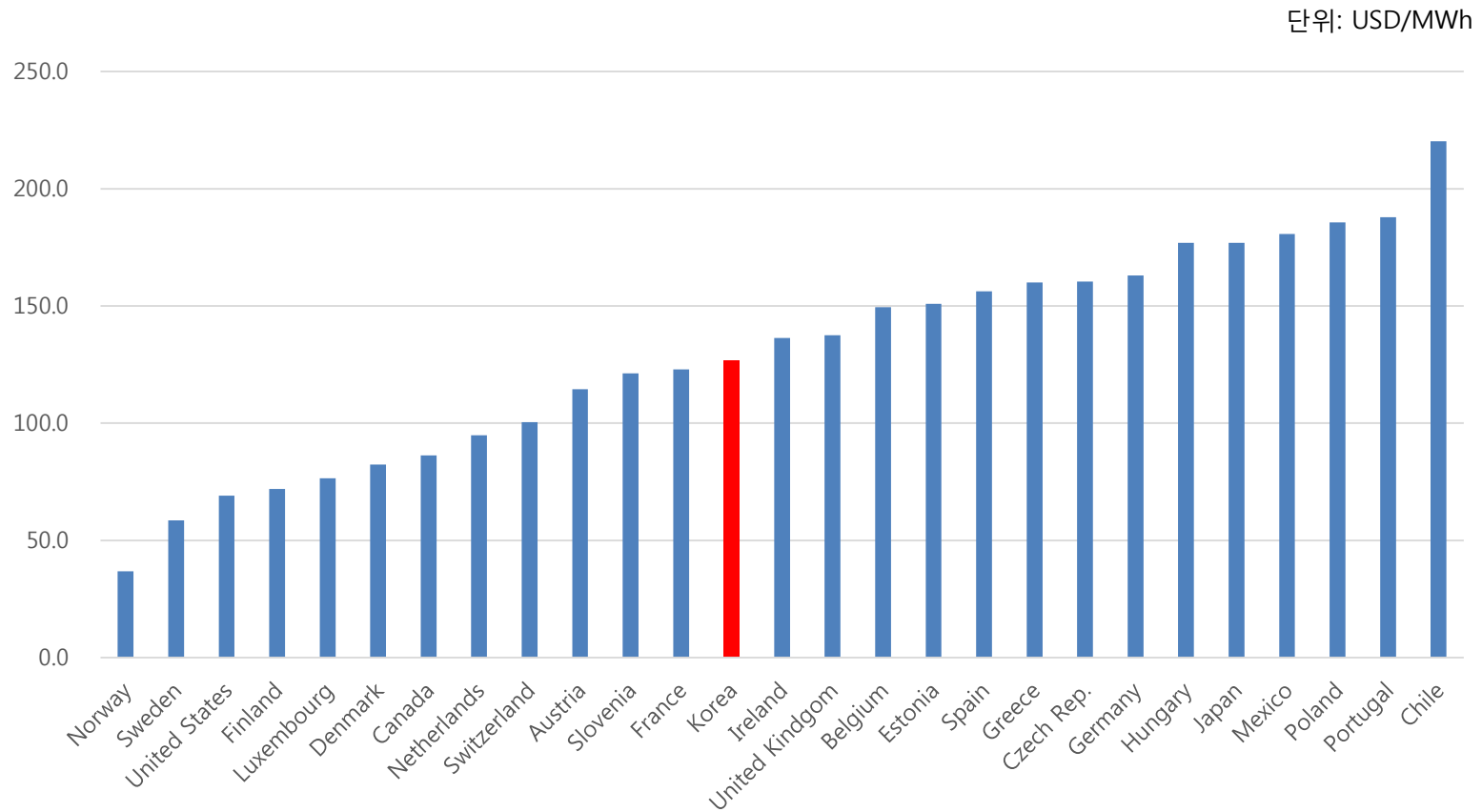
단위: USD/MWh



자료: Energy Taxes and Prices, OECD/IEA(2018).



전기요금 국가별 비교(산업용, 2017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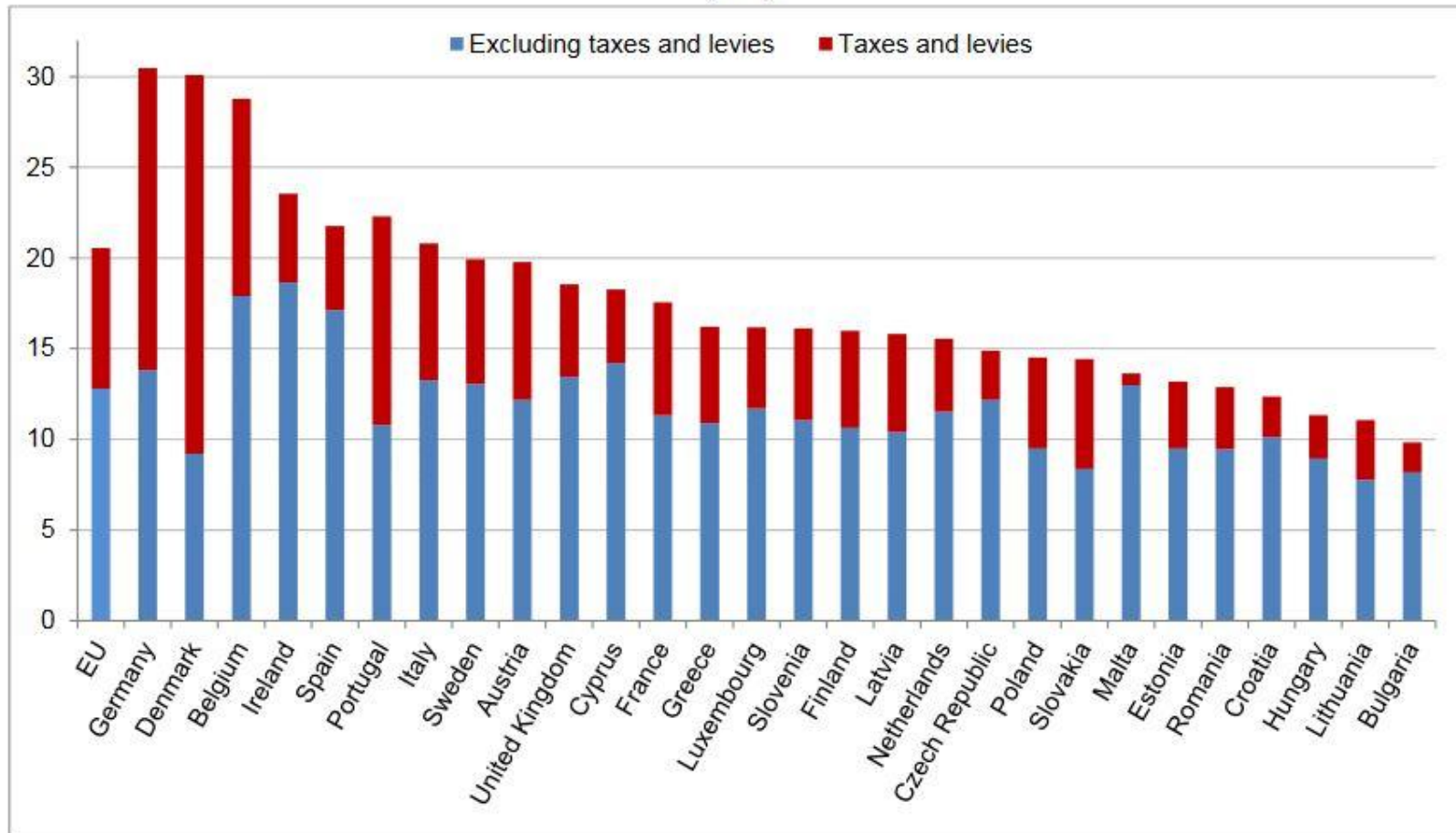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Energy Taxes and Prices, OECD/IEA(2018).

유럽의 전기요금



Average electricity price for households per 100 kWh in 2nd half of 2017
(in €)



자료: <https://www.cleanenergywire.org/factsheets/what-german-households-pay-power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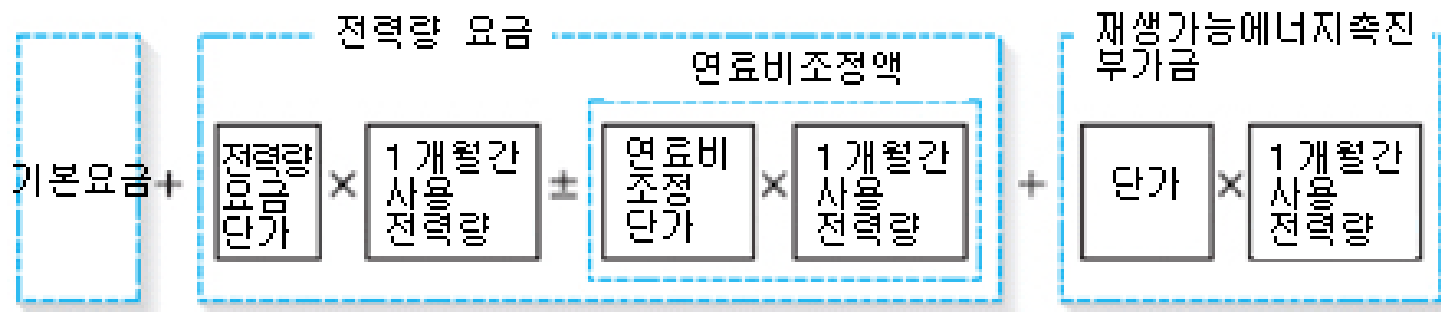
연료비 조정 시스템

- 연료가격 변동분을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

재생가능에너지촉진부가금

- 사용전력량에 비례하여 최종 소매요금에 부가

전기요금 계산방식



※ 전기이용이 0인경우, 기본요금은 반이 된다.

자료: 동경전력 홈페이지.



취약계층 지원방안

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

-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
- 미국: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(LIHEAP), CARE 등
- 영국: Warm Home Discount, Winter Fuel Payment
- 프랑스: 전력공공서비스기여금(CSPE)

지원대상 선별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함

- 우리나라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
 - 필수사용량 보장공제: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력사용량이 200kWh/월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4,000원(저압 기준) 할인 제공

감사합니다

국가에너지·자원 정책 개발의 요람